

大學教育改革에 관한 提言

文 善 在
(韓南大 教育學科)

오늘의 韓國 大學은 계속 팽창해 온 고등교육의 양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質的 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目標와 機能面에서 과중한 부담과 갈등을 안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목표와 기능의 定立과 分擔이 불가피하게 요 請되고 있다.

I

대학교육 개혁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70년대의 10년을 우리는 대학개혁을 '실험대학'이란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80년 대초에는 '졸업정원제'라는 이름 아래 일미 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또 교육개혁심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또다시 개혁의 소리가 높아지고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입시제도를 고친다는 소식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아홉 번이나 고쳤고, 크고 작은 개혁을 모두 손꼽는다면 개혁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필자의 기억으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거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도 되고 한편 의욕이 넘친다는 뜻도 있으니 너

무 시비할 것은 못 되나 문제는 또다시 실패하는 개혁을 되풀이해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신중을 기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구상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인분석의 視角에 따라서는 많은 異見이 나올 수 있겠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 社會構造와 大學教育의 聯關下에서 개혁에 필요한 몇 가지 前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로 지적할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入試制度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問題의 根源은 보다 深層的인 우리 文化와 社會構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매우 소박하고 상식적인 분석이라고 평

할지 모르나 우리 민족은 오랜 가난과 억눌림 속에 살아 왔으며, 해방을 맞아 이 가난과 억눌림의恨이 社會上昇移動의 욕구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엄청난 욕구가 '60년대 이후의 한국 근대화의 거대한 에너지로 수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世界史上 유례 없는 고등교육인구의 폭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곧바로 “잘 살아 보겠다”는 上昇移動에의 욕구로 나타났고 대학은 이들에게 上昇移動의 方便을 마련해 줌으로써 史上 類例 없는 教育神話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가난한 농민의 자녀로부터 상류층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一流大學의 “졸업장”을 얻는 것이 上層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라 여기게 되었고, 사실상 그 “졸업장”은 出世를 위한 티켓으로 有用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들 자녀를 一流大學에 입학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一流大學의 入試를 따내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 上昇移動의 大行進을 入試制度 하나로 막아 본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처방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홍수로 터진 제방을 삼으로 막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한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온 국민의 上昇欲求가 病的인 것인가 혹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랜 가난 속에서 찌들어 기를 펴지 못한 삶 속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소 팔고 논밭을 팔아 자기 자녀를 一流大學에 보내겠다는 욕망을 病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거대한 성취욕구와 에너지를 動力化하지 못한 대학교육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지 냉철히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학정책이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위 서구식 전통인 少數 엘리트주의를 고집해 왔고, 그 거센 大學開放에의 壓力을 이기지 못하여 '70년대 후반에 大學定員을 大幅增員하여 大衆化로 갑작스런 전환을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大學定員을 늘리고 大學을 많이 설립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요, 오히려 先進諸國이 高等教育

의 大衆化 단계를 거쳐 普遍化의 方向을 선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大學教育의 普遍化라는 일대 용단을 내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컨대 필자의 소박한 견해로는 대학에 들어 오겠다는 지방생들을 막을 방도를 연구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국민적 학습의욕을 모두 수용해서 국민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대학개혁이 구상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反問할 것이다. 지금 백만이 넘는 미학생을 수용하기에도 급급한데, 시설과 교수요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어떻게 더 많은 지방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反論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고 싶다. “왜 교육을 네 벽에 갇힌 교실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고. 바로 이 좁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곧 학교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했고 말단 지엽적인 입시제도를 고친다고 실패를 거듭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현대사회는 이미 교육을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 묶어두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전반적 체제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교육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교육매체의 다양화, 지식과 정보의 홍수,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 자율학습기계의 개발, 방대한 방송 및 통신매체망 등—은 그 밖에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교육체제를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자기학습과 상호학습의 범위를 넓혔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를 증진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은 교육의 개념과 구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높은 교육적 열망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잠재적 인력을 우리는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넓은 視角을 가져야 할 것이다.

II

둘째로 지적할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전반적으로 '入試를 위한 교육'으로 고착되어 왔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一流大學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 왔다는 점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S大, Y大, K大 등 一流大學의 간판을 따기 위한 경쟁으로 명들었고 이것은 어떤 처방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難題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難題를 극복함이 없이는 여하한 개혁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 등 처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一流大學 출신과 다른 大學 출신은 취업이나 장래의 出世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名門特許'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실제적인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대학개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일선 고등학교 교장의 근무평정은 인간교육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있기보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일류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켰느냐로 평가되고, 학부모들이 고등학교의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一流病'이요, '亡國病'이라고 비난은 하면서도 이렇다할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一流大學에 보내어 出世시키겠다는 욕구를 病들고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거대한 국민적 에너지로 결속시킬 수 있는 汎國民의 教育體制를 構想할 수 없겠는가 하는 데로 視野를 넓혀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육의 修學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앞서 지적한 교육의 전반적 체계의 재편성을 염두에 두고, 또 필요한 경우 모든 國立大學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대학으로 이름을 붙인다면(예컨대, 國民大學)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엘리트의식', '名門特許' 의식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국립대학

만은 특권의식을 기르는 대학이 아닌 모든 국민의 普通大學으로, 全面的 開放大學(over-all open university) 體制로 改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大學의 門戶를 이렇게 開放하고 教育體制를 재편성하는 일은 國民的 團合과 잠재력을 결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大學教育의 質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매체를 다양화하고 교육동료론 다양화·확대한다면 더 많은 유능한 잠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은 이미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터에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각 기능들을 발전적으로 통합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단안을 내린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 캠퍼스를 망라할(cover) 수 있는 ETV 방송국을 고등교육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면 물러드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 곧 교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면 답변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교육전달의 유일한 통로였던 교실강의를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굳이 교실 안에서 교수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은 全時制로 묶고, 그 외에는 자기 사정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 어느 통로를 거쳐오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동일한 학점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캠퍼스에만 물리는 현상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全時制학생은 등록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국립대학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일정과정을 이수하던 上下, 수평적 이동이 허용되고 동일한 학점과 학위가 수여된다고 가상할 때 서울에서 돈 많이 내고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특히 농장이나 직장 등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교육체계 재편성은 국립대학이 특권적 엘리트대학이 아닌 보통의, 국민들의 국민 속의 대학으로 면모를 바꿈과 동시에 一流病

에 시달려 고질화된 교육을 치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는 오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립대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사립대학 고유의 설립이념과 목적을 존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이념적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며 또 상호경쟁적인 입장에서 서로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완전 허용하고 그 창의성이 존중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개혁은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정원과 졸업정원, 학사내용, 등록금 책정, 교육체제의 개편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사립학교는 그 특성과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창의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

세계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대학교육의 '質의管理' 體制가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어떤 大學이 좋은 대학이고 一流이며, 어떤 교육이 質 좋은 교육인가? 우리나라 실정은 좋은 대학은 성적 좋은 학생이 가기 때문이요, 좋은 학생들이 가지 않는 대학은 나쁜 대학으로 통념화되어 왔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이 입시성적의 커트라인 순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 셈이다.

무엇을 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있는지 일반은 모르고 있다. 대학교육의 質管理 기준이 合理的으로 마련되고 그 기준에 따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지표가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 (consensus)로 제시될 때 대학개혁의 방향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의 質管理를 위한 大學公認準制度 (Accreditation)가 지역별로, 기능별로, 또 국가 수준에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

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로 일선 대학의 교육을 평가·측정하고 質을 管理·統制하며 또 公認準하는 자율적 기관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70년대 실험대학운동을 전개하면서 탄생된 대학 및 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이 기능의 일부를 발휘해 왔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대학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의 대학설립인가를 비롯한 公認準기능은 문교부가 담당해 왔다고 하겠다. 정부는 차계에 이 전문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기관을 탄생시키는 일을 추진하면서 대학교육의 百年之大計를 좀더 여유 있는 자세로 세워 보았으면 좋겠다. 대학개혁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질 좋은 교육을 베푸는 데 있다면, 아낌없이 줄 것은 주어 버리는 단안이 아쉽다.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자문해 본다면 그 회답은 자명한 것이다. 대학개혁은 대학 밖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학 안의 합리적 지표물 가진 주체적 세력이 형성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구심세력을 정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데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大學教育의 質 管理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根本的인 問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나름의 大學理念과 目的을 定立하고 大學改革을 추진해 왔던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大學 교육의 教育課程과 教授, 學生指導, 그리고 그 밖의 전반적인 運營의 改革은 원칙상 모두 理念에 의하여 지배되어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우리는 教育法을 制定하면서 第108條에 이렇게 明示하였다. 즉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필요한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育 研究하여 指導의 人格을 도야하는 目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大學教育의 가장 추상적인 理念을 明文化한 것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른 具體的 目的을 수반할 때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1949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 이후 몇 차례의 法改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抽象的이고 超時間的"이라는 이유에서 그대로 두었다. 우리의 社會變動

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급격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未來의 祖國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추상적 이념이 大學과 國家의 장래를 向導할 수 있는 살아 있는 理念과 目的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고등교육의 엄청난 量的 팽창에 內在해 있는 문제가 본질상 그것이 확고한 理念과 目的에 指導된 현상이 아니라 理念과는 무관한 非本質的 要因에 의하여 좌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理念이 不在했거나 제리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70년대에 추진된 대학개혁사업도 착수 당시부터 高等教育의 理念과 機能을 정립하고, 이 정립된 이념과 기능에 따라 각종 高等教育機關을 再調整할 것을 改革의 基本原則으로 삼았으나 실제로 진행된 研究나 個體 大學의 改革案에 나타난 理念과 目標은 극히 추상적이어서 國家 次元에서나 機關別 次元에서나 目標와 機能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대다수의 個別的인 고등교육기관들이 마땅히 설립취지에 따라 그 나름의 具體化된 理念과 目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대부분이 教育法 第108條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集團이나 機關에 있어서도 그 기관의 目標의 明確性과 機能分化 여하가 그 기관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는 重要 要因이 되지만, 특히 專門的 知識과 高級人力의 산출기관인 大學의 효율성과 質的 向上은 그 機關目標의 明確性과 具體性, 그리고 이에 따르는 機能의 分化와 分擔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적으로 말해서 教育遂行의 成果를 측정할 尺度가 없는 셈이다. 이러한 牧歌的 運營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다.

오늘의 韓國 大學은 계속 팽창해 온 고등교육의 양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質的 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目標와 機能面에서 과중한 부담과 갈등을 안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목표와 기능의 定立과 分擔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理念定立 作業을 게을리 함으로써 精神分裂的인 '正體의 危機'를 맞게 되었다. 그 단적인 실례가 오늘의 韓國 大學

을 휩쓸고 있는 急進 左傾學生들에 의한 暴徒와 民衆革命의 論理다. 우리는 그들의 논리가 從屬 理論과 新마르크시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 대항할 韓國 大學으로서의 理論과 理念을 提示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력한 방관자로서 속수무책의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현실은 대학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理念定立에 얼마나 게을렀던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대학개혁에 선행하여 우리는 韓國의 大學理念과 目的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美國도 제3 세계도 아닌 우리 나름의 이념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다. 이 大學理念의 危機的 狀況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一連의 目的定立 事業이 個別 機關에서부터 汎國家의 水準으로까지 곧 着手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 사업은 대학인이나 몇몇 정책 입안자에게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合議에 도달할 수 있는 21世紀를 향한 韓國 大學의 指向像이요, 大章典으로 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의 大學은 우리 國家의 運命을 좌우할 막중한 實務를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大學改革은 이러한 기초작업 위에서 착실히 추진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50년대부터는 '새교육' 운동으로 초등교육의 개혁을, 그 다음 '중학 무시협진학' 제도를,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사업'을 추진했고, '70년대부터는 '대학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러한 절기찬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入試教育'의 병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개혁의 궁극적 표적이 되어야 할 대학이 '一流病'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이제부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정상적인 궤도로 향상시키고 모든 대학이 그 특성에 따라 一流大學이 되도록 개혁하는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개혁에 필요한 네 가지 前提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비전문적인 소박한 所見이었음을 첨언하고자 한다.

*